

#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최 정 윤\*\*  
유 두 호\*\*\*

## 국문요약

최근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정책 인식은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자체 복지정책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자체 복지정책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에서는 경제, 고용·노동 정책이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정책은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시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복지정책, 증세 태도, 정책 만족도, 정책 인식, 부산광역시

##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어느 한 가지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복지 문제는 소득 양극화와 같은 경제문제로 인해 극심해지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정 계층이 더 어려움을 겪는 양상을 보인다.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 이 논문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주최한 「2021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학술대회 논문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국민들의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지방정부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환경에 맞게 고안된 자체 정책들을 추진한다.

부산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문제이다. 인구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역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부산시의 경우 2011년 27,759명에서 2020년 15,058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출생아가 45.75%(12,701명) 줄었으며, 합계출산율<sup>1)</sup> 역시 2011년 1.24명에서 2020년 0.837명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 2021).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비율<sup>2)</sup>도 2011년 11.8%에서 2020년 19.4%로 전국 평균 16.4%을 웃돌고 있다(통계청, 2021).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부산 내 대학들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이다. 청년의 부산 이탈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제성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령인구 및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부산을 포함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경제, 고용·노동, 주거, 가족·돌봄, 건강·보건,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등 각 분야별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복지정책은 분야에 따라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도 정책분야와 정책대상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세금을 통해 충당된다.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할지라도 시민들의 증세 태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복지정책과 증세 태도 간 관계의 경우 정부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증세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정책 만족도와 타 지역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증세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목하고 분야별 복지정책의 만족도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충당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증세 태도의 개념 및 결정요인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정

1)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통계청)

2) 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통계청)

책의 확대는 이를 집행하는 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와 연결되며 정책 집행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증세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수혜자와 부담자가 상이하거나 혜택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은 증세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므로(이미숙, 2020), 증세에 대한 태도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태도는 어떠한 대상, 사건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판단으로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Robbins & Judge, 2018). 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판단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증세 태도 역시 개인이 속한 상황과 인지·정서·행위에 따라 증세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증세 태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성향은 증세 태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정치이념과 복지 선호에 따라 복지 태도는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닐수록 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이현우, 2013; 남윤민, 2021; 주은선·백정미, 2007). 소득 차이 또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강조되는데(남윤민, 2021), 소득 차이는 정치이념과 복지정책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윤태·서재욱, 2014; 이현우, 2013; 조진만, 2014).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증세 태도는 정치적 성향이나 소득계층과 같은 요인만으로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김윤태·서재욱, 2014). 우리나라가 가진 정치적 특이성과 급진적인 경제성장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최근 개인의 사회활동 및 정책과정 참여 등 여러 방면이 증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윤태, 2015; 남윤민, 2018; 조진만, 2014). 예를 들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등장하게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증세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Alm et al., 1992; Cowell & Gordon, 1988; Lieberman, 2002; Scholz & Lubell, 1998; 박경돈, 2015; 신나리·이영한·박기백, 2017; 유나리·문승민, 2020; 이미숙, 2020; 이승주·박소영, 2019).

또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서도 증세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신뢰와 역량은 정부가 국민의 삶과 행복, 사회발전과 국가변영을 위한다는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형성된다(Mettler & Soss, 2004; 주혜린·황정윤, 2020). 이러한 정부신뢰와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증세에 있어서도 순응하게 된다(이현우, 2013; 주은선·백정미, 2007; 윤선일·엄영호·유두호, 2020). 하지만 국민들이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집행 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예산 수반을 위한 증세에 있어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Pierson, 1994; Sears & Citrin, 1982).

## 2. 부산의 분야별 복지정책 추진 현황

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따라 복지정책은 분야별, 정책 대상별로 구분하여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부산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산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방역과 경제의 투트랙 방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의 지원과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기초보상제도'와 최상위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안착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날개·청년저축 통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1).

부산시의 청년인구 유출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부산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인구는 최근 10년간(2011~2020) 16.43%(167,156명) 감소하였으며(부산시청 홈페이지, 2021), 이러한 노동인구의 부족은 지역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부산에서 근로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디딤돌카드'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부산청년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재직을 하면 복지포인트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부산시청 홈페이지, 2021). 또한,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약을 추진하는 60+시니어일자리 창출협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법적 범위인 3.4%를 초과한 5%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청년인구(20~39세)는 계속 감소하였지만 부산 내 21개의 대학의 노력으로 대학생(20~24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적극적인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에서는 기숙사비, 학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지원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부산시청 홈페이지, 2021).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부산시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분산된 주거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인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월세와 신혼부부들의 주택 용자금 지원(부산시청 홈페이지, 2021) 등을 실시하여 부산시민의 주거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부산아이 다다가치키움'은 부산시의 보육정책으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및 다자녀가정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한다. 다자녀 가족 대상의 '부산시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을 통해 부산 내 각종 시설이용료들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모든아이 차액보육료 지원'을 이용하여 수혜자들은 만3~5세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 및 난임주사제 투약 지원(부산시청 홈페이지, 2021)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저출산 외에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19.4%(전국 평균 16.4%)이며, 2041년 노령화지수는 전국에서 5번째,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432%이다(통계청, 2021). 부산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고, '50+생애재설계 대학' 및 '신중년 인문학당' 운영과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등 노인들의 활기찬 삶 증진과 함께 생애주기형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1).

〈표 1〉 부산시 분야별 복지정책 추진 현황

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경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지원
	부산형 긴급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및 돌봄위기 발생 가구의 긴급돌봄 지원
	청년날개·청년저축 통장	근로(차상위)청년의 사회안착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지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소득하위 70% 1인 월 최대 30만원 지급(2020년 소득하위 40%)
고용 노동	청년디딤돌 카드	18~34세 미취업 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중소기업 3개월 재직 중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중위소득 150%이하)
	장노년 민간일자리 지원체계	장노년일자리창출 민간협약 및 60+시니어일자리 창출협약 등
	장애인 고용 확대	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법 3.4%, 조례 5%)
주거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분산된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원스톱 창구 마련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 영구 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청년 대상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택용자 지원 등
가족 돌봄	부산시 가족사랑 카드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세자녀 이상 가족대상으로 도시철도, 글로벌빌리지 수강료, 청소년 수련관, 시 체육시설 50% 할인 등
	모든아이 차액보육료지원	만3~5세 정부지원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홀몸노인·거동불편노인 돌봄 및 ICT활용 응급상황 돌발 대처 지원
건강 보건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난임시술, 난임주사제 투약지원
	1인가구 생애주기별 준비교육	(청년) 독립생활 준비, (중장년) 홀로서기 심리상담, (고령층) 건강한 노년준비
	지역 밀착형「마을건강센터」사업	동단위 건강관리사업의 전달체계 일원화 및 보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교육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
	부산지역 대학생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학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및 취업준비 지원
	50+생애재설계 대학	생애재설계, 경력개발 등을 통한 창업 및 사회경제 참여 유도
여가	지역어르신 소통·화합의 장 마련	실버영상제, 노인생활체육대회, 노인대학연합예술제 등 개최
	신중년 인문학당 운영	문학, 예술, 심리학, 철학 등 인문중심 강좌개설 신중년 소양강화 고취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	기초수급자 등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 공동체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조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복지·건강·돌봄·주거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대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가스 원격점검, 냉장고 도어센서 등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관리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읍면동 인적네트워크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자료: 부산시청 홈페이지(2021), 부산광역시(2021a, b), 부산복지개발원(2020)

### 3. 복지정책 확대와 증세 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교의 존폐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게 되어 경제가 침체되고 복지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세분화 되면서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은 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세금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주은선·백정미, 2007; 윤선일·엄영호·유두호, 2020)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Scholz & Lubell, 1998; Jimenez & Iyer, 2016; 문승민·최선미, 2019)

증세 태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복지정책 확대와 증세 태도 간 관계에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별, 가계소득, 혼인,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소의 변수가 주로 다루어졌다(Campbell, 2009; Lowery & Sigelman, 1981; Staudt, 1995; Skocpol, 2000; 김희진·전희정, 2010; 김수정·남찬섭, 2015; 김사현, 2015; 이윤경, 2017).

증세가 수반되는 복지 확대는 인구사회학적 요소 외에도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박경돈, 2015; 이승주·박소영, 2019; 유나리·문승민, 2020; 이미숙, 2020). 증세 태도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추진방식, 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그만큼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사람들은 조세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고(Alm et al., 1992),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Cowell & Gordon, 1988; Scholz & Lubell, 1998; Lieberman, 2002; 신나리·이영한·박기백, 2017).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고(윤선일·엄영호·유두호, 2020) 적절한 수준의 정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증세 동의 대신 무임승차(Scholz & Lubell, 1998), 복지지출 축소(Calzada & Del Pino, 2008) 또는 증세 회피를 선택하게 된다(Spicer & Lundstedt, 1976; Frey & Feld, 2002). 이와 같은 세금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은 국가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Pierson, 1994; Sears & Citrin, 1982). 따라서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정요인으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발생하는 정책 인식에 주목한다. 또한, 경제, 고용·노동, 주거, 가족·돌봄, 건강·보건,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등 세부 영역에 대한 정책 만족도는 부산시민의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관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 Ⅲ.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 1. 연구가설 및 모형

##### 1) 정책 만족도

과거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 정책은 점점 국민들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최정윤·유두호·장용석, 2021).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공될 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Salamon, 2000),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만족도는 정부가 목표한대로 정책활동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수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최선미·김태형, 2020). 따라서 정부가 정책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품질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만족도 높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재원의 상당수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마련된다(윤선일·엄영호·유두호, 2020). 사회적 교환(exchange context)의 맥락에서 증세를 살펴보면 정부가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해당 정책과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할 때 증세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Cowell & Gordon, 1988; 문승민·최선미, 2019). 즉, 정부는 증세를 원한다면 정책 만족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증세의 특성은 복지정책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복지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에 비해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보편주의와 성장주의, 진보와 보수처럼 정치 성향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좌우되는 분야이다(허수연·김한성, 2016).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책 특성, 정책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크며 이는 증세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복지정책 만족도에 주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지가 크며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면 세금 부담 의향이 높아진다(이윤경, 2017). 또한,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복지증세에 대한 의향을 높이고(박경돈, 2015), 복지정책의 목표 달성과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평가는 증세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Mettler & Soss, 2004; 금현섭·백승주, 2010; 주혜린·황정운, 2020). 이러한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 간 관계 검증을 위한 가설 1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2) 정책 인식: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최근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중앙정부의 대리인(agent)으로서 주로 주어진 정책을 수행하던 것과 다르게 하나의 분명한 행위자(actor)로서 스스로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집행한다(유두호·유나리, 2020). 즉, 지방자치단체는 행위자성(actorhood)이 발현되면서 자체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역량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성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목표나 역량에 따라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정책을 보고 경쟁적으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상대적 행위자성이 발현될 수도 있다(유두호·유승주, 2020). 즉, 상상 속의 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타 단체를 의식하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책 집행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한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이 다양하고 자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만족스럽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다. 단, 증세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되며 한정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다른 항목을 줄이기 어려울 때 활용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이승주·박소영, 2019) 지방자치단체의 증세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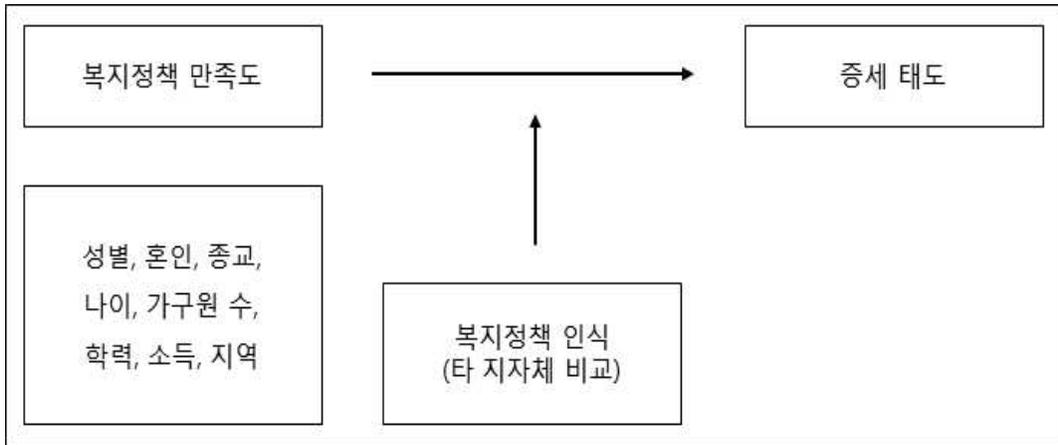
이는 곧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영향력이 지역주민들의 증세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그 정책 자체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만족도와 같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최대한의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만족을 준다고 인식한다면 상대적으로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정책 인식은 증세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지역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의 상호작용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설 2, 3을 도출하였다.

가설 2.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정책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설 3. 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정책 인식 간 상호작용은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한 <2020년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중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본 자료는 부산 시민의 복지실태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부산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필요성 등을 비롯하여 부산시 시민들의 생활현황과 사회경제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증세 태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순서형 척도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지정책 만족도 변수와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 인식 변수의 곱을 통해 구성된 상호작용항이 분석에 포함됨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생활부터 고용과 노동, 주거, 가족 돌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지역공동체까지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산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이다. 증세 태도는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진 더미변수를 통해 측정되기도 하지만(문승민·최선미, 2019; 윤선일·엄영호·유두호, 2020)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측정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유나리·문승민, 2020), 복

지프로그래姆 확대와 복지예산 증가를 위한 증세 태도(박경돈, 2015),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증세 태도(이윤경, 2017) 등과 같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증세 태도의 측정을 위해 부산시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증세 의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부산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방안에 관한 질문이며 부산시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방법으로는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은게 좋다’의 A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게 좋다’의 B 중 A가 매우 중요하면 1, B가 매우 중요하면 5로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복지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복지정책 인식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정책 만족도 변수는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되며(최선미·김태형, 2020; 최정윤·유두호·장용석, 2021) 문화예술(조정래·박지윤, 2017), 혁신지원(김경아, 2021)과 같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동일한 측정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복지정책 만족도 변수를 생활 영역별로 부산시의 관련 정책과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전반적 지원 수준을 물어본 내용을 포함하여 경제생활, 고용과 노동, 주거, 보호가 필요한 가족 돌봄, 건강과 보건, 교육, 여가생활, 지역공동체까지 총 9가지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 복지정책 만족도 변수는 전반적인 복지정책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에서는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을 모두 활용하였다.

다른 독립변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복지정책 인식이다. 정명은(2012)의 연구는 지방정부가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강조하였으며 유두호·유승주(2020)의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 기업, 타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지 인식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상대적인 사회문제 해결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타 지역의 자체 복지사업에 비해 부산시의 자체 복지사업 수준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족함’의 1점부터 ‘매우 충분함’의 5점까지 응답하게끔 구성한 5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인식 변수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가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도라면 두 번째 독립변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상대적인 정책 만족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의 곱을 통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부산시 시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증세 태도 분석의 정교함을 높이고자 하였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구성되었으며, 혼인은 기혼 1, 미혼 및 기타는 0으로 구성하였다. 종교는 있는 경우 1, 없으면 0으로 구성하여 세 가지 변수 모두 더미변수로 처리되었다. 나이는 2020년도에서 응답자의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더한 값으로 계산되었다. 소득의 경우 2019년 1년 동안 모든 가구원의 총소득을 합한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단위는 만 원이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민간보험, 부동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사회보험, 기타 정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기타 수입(앞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으로서 자격증 대여, 증여, 상속, 퇴직금 등)이 모두 해당된다. 가구원 수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의 수, 학력은 미취학부터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대학원으로 측정된 문항, 지역은 응답자의 거주지역(자치구)을 통해 측정되었다.

〈표 2〉 변수 및 측정문항

구분	변수	측정문항	비고	
증속 변수	증세 태도	다음은 복지정책의 방향과 실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부산시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은게 좋다. B: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게 좋다. ①A가 매우 중요 ②A가 중요 ③반반이다 ④B가 중요 ⑤B가 매우 중요		
독립 변수	복지정책 만족도	종합	전반적인 복지정책 지원수준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경제	경제생활(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	
		고용·노동	고용과 노동(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주거	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가족·돌봄	보호가 필요한 가족 돌봄(영유아보육,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와 수발)	
		건강·보건	건강과 보건(건강관리 의료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교육	교육(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여가	여가생활(여가시설,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도서관 등 마을생활여건)		
	복지정책 인식 (타 지자체 비교)	타 지역의 자체 복지사업과 비교하여 부산시의 자체 복지사업 수준에 대한 인식 ①매우 부족함 ②비교적 부족함 ③보통 ④비교적 충분함 ⑤매우 충분함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더미	
	혼인	기혼(1), 미혼 및 기타(0)	더미	
	종교	있음(1), 없음(0)	더미	
	나이	응답자의 나이		
	소득	2019년 1년 동안 가구원 총 소득(단위: 만원) :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민간보험, 부동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사회보험, 기타 정부 보조금, 기타 수입 총합		
	가구원 수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학력	응답자의 학력 ①미취학(만7세 미만) ②무학(만7세 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4년제 미만) ⑦대학(4년제 이상) ⑧대학원(석사) ⑨대학원(박사)	
지역	응답자의 거주지역 ①중구* ②서구 ③동구 ④영도구 ⑤부산진구 ⑥동래구 ⑦남구 ⑧북구 ⑨해운 대구 ⑩사하구 ⑪금정구 ⑫강서구 ⑬연제구 ⑭수영구 ⑮사상구 ⑯기장군	더미

주) \*준거더미

## IV.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전체 관측치는 설문에 응답한 부산시민 중 특정 문항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총 1,629명이다. 종속변수인 증세 태도는 평균 3.09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방향에 조금 더 가까웠다. 복지정책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알아본 종합 만족도는 평균 3.71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부 영역에서도 가장 낮은 고용·노동이 평균 3.463부터 가장 높은 교육이 평균 3.841로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 인식 변수는 평균 3.129로 부산시 시민들은 부산시의 자체 복지사업 수준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에서는 소득 변수가 평균 3449.877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약 60이었다. 응답자 중 남성은 1,107명(67.96%), 여성은 522명(32.04%)이고 결혼한 사람의 비율은 57.7%, 미혼 및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응답자의 비중이 40% 높았으며,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39.29%), 중학교(15.41%), 초등학교(15.04%), 4년제 이상 대학(14.98%), 4년제 미만 대학(11.17%), 무학(3.13%), 대학원 석사(0.61%), 대학원 박사(0.37%)의 순서를 보였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중구가 3.81%로 가장 작은 비중을 보였고 해운대구가 9.5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표 3>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증세 태도	1,629	3.090	0.912	1	5	
복지정책 만족도	종합	1,629	3.713	0.775	1	5
	경제	1,629	3.645	1.030	1	5
	고용·노동	1,629	3.463	1.074	1	5
	주거	1,629	3.627	0.884	1	5
	가족·돌봄	1,629	3.742	0.804	1	5
	건강·보건	1,629	3.785	0.860	1	5
	교육	1,629	3.841	0.846	1	5

	여가	1,629	3.750	0.857	1	5
	지역공동체	1,629	3.730	0.817	1	5
복지정책 인식(타 지자체 비교)		1,629	3.129	0.824	1	5
	가구원 수	1,629	2.197	1.098	1	6
	소득	1,629	3449.877	2435.318	50	18000
	나이	1,629	60.893	14.824	20	94
	성별	1,629	남성 1,107명(67.96%), 여성 522명(32.04%)			
	혼인	1,629	결혼 940명(57.7%), 미혼 및 기타 689명(42.3%)			
	종교	1,629	있음 496명(30.45%), 없음 1,133명(69.55%)			
	학력	1,629	무학(만7세 이상) 51명(3.13%), 초등학교 245명(15.04%), 중학교 251명(15.41%), 고등학교 640명(39.29%), 대학(4년제 미만) 182명(11.17%), 대학(4년제 이상) 244명(14.98%), 대학원(석사) 10명(0.61%), 대학원(박사) 6명(0.37%)			
	지역	1,629	중구 62명(3.81%), 서구 91명(5.59%), 동구 87명(5.34%), 영도구 91명(5.59%), 부산진구 115명(7.06%), 동래구 133명(8.16%), 남구 123명(7.55%), 북구 101명(6.2%), 해운대구 155명(9.52%), 사하구 122명(7.49%), 금정구 124명(7.61%), 강서구 53명(3.25%), 연제구 111명(6.81%), 수영구 98명(6.02%), 사상구 95명(5.83%), 기장군 68명(4.17%)			

실증분석 이전에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한 양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종속변수인 증세 태도는 독립변수인 복지정책 만족도(종합)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 고용·노동 영역의 복지정책 만족도와는 양(+)의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여가 영역의 복지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인식(타 지방자치단체 비교)과는 음(-)의 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에서는 복지정책 만족도(종합)와 세부영역 복지정책 만족도 간 상관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0.7이상의 값을 보이는 결과는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042	1									
3	0.118*	0.602*	1								
4	0.108*	0.573*	0.682*	1							
5	0.062	0.544*	0.493*	0.516*	1						
6	-0.059	0.463*	0.403*	0.305*	0.417*	1					
7	-0.062	0.439*	0.354*	0.320*	0.289*	0.454*	1				
8	-0.105*	0.417*	0.247*	0.262*	0.262*	0.305*	0.442*	1			
9	-0.101*	0.497*	0.330*	0.329*	0.294*	0.377*	0.342*	0.441*	1		
10	-0.061	0.575*	0.425*	0.381*	0.379*	0.395*	0.395*	0.368*	0.485*	1	
11	-0.122*	0.103*	0.106*	0.046	0.075*	0.167*	0.151*	0.139*	0.166*	0.132*	1

주1) ①증세 태도, ②복지정책만족도(종합), ③복지정책만족도(경제) ④복지정책만족도(고용·노동) ⑤복지정책만족도(주거) ⑥복지정책만족도(가족·돌봄) ⑦복지정책만족도(건강·보건) ⑧복지정책만족도(교육) ⑨복지정책만족도(여가) ⑩복지정책만족도(지역공동체) ⑪복지정책인식(타지자체비교)

주2) 통제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1임

## 2.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부산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확인하였다. 평균 VIF는 1.61이었으며 복지정책 만족도(종합) 변수는 1.04, 복지정책 인식(타 지자체 비교) 변수는 1.02, 상호작용항은 1.02로 나타났다. 따라서 VIF값이 10보다 클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민인식·최필선, 2012)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한 경우 일반 OLS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부호를 해석하기도 한다(신현중·인석환, 2019; 유두호·엄영호, 2020). 이에 OLS 회귀분석도 시행하였지만 분석결과 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Model 1은 통제변수만의 영향력을 확인한 통제모형이다. 분석결과 소득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에서는 서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기장군이 중구에 비해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하구는 중구에 비해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Model 2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주요 독립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을 확인한 기본모형이다. 복지정책 인식(타 지자체 비교)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산시의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증세 태도에 부정적이다. 통제변수에서는 소득 변수에서 통제모형과 동일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에서는 통제모형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Model 3은 복지정책 만족도와 상대적 복지정책 인식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한 통합모형이다. 주요 독립변수부터 살펴보면 복지정책 만족도(종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복지정책 인식(타 지자체 비교) 변수는 음(-)의 방향으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정책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시민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산시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경우 증세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증세는 정부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능 확대에 찬성할지라도 기능 확대를 위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문승민·최선미, 2019). 이는 복지정책 인식이 증세 태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하지만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경우 증세에 반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증세 태도에 있어 이와 같은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올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5〉 분석결과

종속변수: 증세 태도	Model 1 (통제모형)	Model 2 (기본모형)	Model 3 (통합모형)	
복지정책 만족도(종합)		0.101 (0.063)	0.089 (0.063)	
복지정책 인식 (타 지자체 비교)		-0.227*** (0.059)	-0.259*** (0.060)	
복지정책 만족도 × 복지정책 인식			0.334*** (0.075)	
성별	-0.042 (0.135)	-0.051 (0.135)	-0.030 (0.136)	
혼인	0.036 (0.153)	0.022 (0.153)	0.022 (0.153)	
종교	-0.151 (0.105)	-0.164 (0.105)	-0.153 (0.106)	
나이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소득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학력	-0.018 (0.053)	-0.014 (0.053)	-0.017 (0.053)	
가구원 수	0.106 (0.067)	0.111* (0.067)	0.103 (0.067)	
지역	서구	-0.932*** (0.310)	-0.884*** (0.311)	-0.866*** (0.312)
	동구	0.147 (0.307)	0.186 (0.308)	0.138 (0.310)
	영도구	-0.787** (0.305)	-0.723** (0.306)	-0.730** (0.307)
	부산진구	-0.192 (0.289)	-0.168 (0.291)	-0.182 (0.291)
	동래구	-0.060 (0.284)	-0.026 (0.286)	-0.007 (0.287)
	남구	-0.823*** (0.285)	-0.800*** (0.286)	-0.800** (0.287)
	북구	-0.449 (0.295)	-0.450 (0.296)	-0.432 (0.296)
	해운대구	-0.528* (0.286)	-0.498** (0.287)	-0.469 (0.288)
	사하구	0.617** (0.308)	0.585** (0.310)	0.596* (0.311)
	금정구	-0.047 (0.288)	-0.122 (0.289)	-0.077 (0.291)
	강서구	0.272 (0.337)	0.330 (0.339)	0.368 (0.340)
	연제구	-0.256 (0.292)	-0.206 (0.293)	-0.175 (0.294)
	수영구	0.173 (0.297)	0.191 (0.297)	0.177 (0.298)
	사상구	-1.066*** (0.297)	-0.973*** (0.298)	-0.908*** (0.300)

	기장군	-1.262*** (0.346)	-1.213*** (0.342)	-1.036*** (0.342)
cut 1		-3.933 (0.557)	-3.914 (0.558)	-3.930 (0.559)
cut 2		-2.081 (0.547)	-2.041 (0.548)	-2.038 (0.549)
cut 3		-0.030 (0.544)	0.024 (0.545)	0.039 (0.546)
N		1,629	1,629	1,629
Chi2(df)		121.18(22)***	137.50(24)***	157.71(25)***
Pseudo R2		0.028	0.032	0.037
Log likelihood		-2084.759	-2076.599	-2066.493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지역의 준거더미는 중구임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만족도와 복지정책 인식의 상호작용은 증세 태도에 통계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만족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정책 인식 간 상호작용은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복지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의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면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복지정책의 상대적 인식은 오히려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정책 만족도와 만날 경우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정부 신뢰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연관지어 풀이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산시의 복지정책 수준을 높게 평가한다면 그만큼 부산시에 대한 신뢰와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강화된다(유나리·문승민, 2020). 따라서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통제변수에서는 앞선 통제모형,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변수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 3.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에 따른 분석

한편 본 연구는 복지정책 만족도 변수를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경제, 고용·노동, 주거생활 등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다양한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에 따른 분석결과

종속변수: 증세 태도		Model 1 (통제모형)	Model 2 (통합모형)
복지정책 만족도	경제		0.248*** (0.067)
	고용·노동		0.169*** (0.064)
	주거		0.080 (0.067)
	가족·돌봄		-0.153** (0.073)
	건강·보건		-0.078 (0.068)
	교육		-0.125* (0.067)
	여가		-0.166** (0.068)
	지역공동체		-0.208*** (0.072)
성별	-0.042 (0.135)	0.012 (0.136)	
혼인	0.036 (0.153)	-0.042 (0.153)	
종교	-0.151 (0.105)	-0.156 (0.106)	
나이	-0.005 (0.005)	-0.004 (0.005)	
소득	-0.001*** (0.001)	-0.001*** (0.001)	
학력	-0.018 (0.053)	-0.014 (0.054)	
가구원 수	0.106 (0.067)	0.130* (0.067)	
지역	서구	-0.932*** (0.310)	-0.877*** (0.315)
	동구	0.147 (0.307)	0.193 (0.314)
	영도구	-0.787** (0.305)	-0.654** (0.311)
	부산진구	-0.192 (0.289)	-0.170 (0.295)
	동래구	-0.060 (0.284)	-0.247 (0.290)
	남구	-0.823*** (0.285)	-0.910*** (0.291)

북구	-0.449 (0.295)	-0.480 (0.302)
해운대구	-0.528* (0.286)	-0.620** (0.290)
사하구	0.617** (0.308)	0.524* (0.308)
금정구	-0.047 (0.288)	-0.081 (0.292)
강서구	0.272 (0.337)	0.192 (0.341)
연제구	-0.256 (0.292)	-0.427 (0.298)
수영구	0.173 (0.297)	0.158 (0.302)
사상구	-1.066*** (0.297)	-0.906*** (0.302)
기장군	-1.262*** (0.346)	-1.049*** (0.343)
cut 1	-3.933 (0.557)	-4.933 (0.659)
cut 2	-2.081 (0.547)	-3.017 (0.649)
cut 3	-0.030 (0.544)	-0.907 (0.646)
N	1,629	1,629
Chi2(df)	12.75(7)**	193.34(30)***
Pseudo R2	0.003	0.045
Log likelihood	-2138.975	-2048.678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지역의 준거대미는 중구임

분석결과, 경제, 고용·노동에서는 양(+)의 영향력,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에서는 음(-)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 고용·노동 복지정책 만족도는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복지정책 만족도는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경제 영역은 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이며 고용·노동은 취업, 직업, 고용조건과 같은 정책이다. 두 정책의 경우 시민들의 전반적인 계층에서 모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산업과 같은 큰 분야는 정부의 총체적인 능력을 지칭하는 정부역량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7). 따라서 정부역량이 상당히 발휘되고 전 계층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제,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정책은 상대적으로 특정 계층이 정책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은 영유아·노인·장애인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정책이다. 교육 역시 학생,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며 여가, 지역공동체 역시 관련된 특정 서비스를 수혜 받고자 하는 대상들이 존재하는 정책분야이다. 이처럼 복지분야는 세부 영역별로 보았을 때, 특정 정책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정책대상의 정책만족이 중요하다(최선미·김태형, 2020).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특성이 증세 태도의 분석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방분권화가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정책 집행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정책 인식은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자체 복지정책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부산시 자체 복지정책의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에서는 경제, 고용·노동 정책이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 정책은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도출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산시를 연구범위로 하여 다양한 자체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부산시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산시는 경제분야부터 고용·노동,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들은 다양한 분야만큼 그 정책을 수혜하는 정책대상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세부 영역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부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증세 태도의 연관성을 파악했을 때,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 만족도는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정책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증세에 대해 시민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추후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부산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집행이 아니라 이를 집행한 후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학습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시의 효과적인 복지정책 집행을 위해 시민들이 정책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 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새로운 복지 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수혜자는 누구인지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는 이슈가 되기 쉬우며 자칫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효과적인 복지정책 집행과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책임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SNS를 통한 소통창구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중 하나인 챗봇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대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시민들이 문의사항을 빠르게 피드백 해준다면 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책 인식이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정책의 목적, 투입되는 예산, 수혜자 범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정책과는 어떠한 점이 유사하며 차별화되는지를 제시한다면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파악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부 복지정책 영역별로 정책수혜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 세부 복지정책 만족도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같은 복지정책이라도 정책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의 만족도는 다르고 여기에서 오는 증세 태도 또한 차이가 있다. 특히 가족·돌봄, 교육, 여가, 지역공동체처럼 증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분야는 특정 계층에 정책수혜가 한정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세부 정책별 대상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 조사 외에 이들의 의견을 별도로 파악하여 정책이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 영역의 정책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방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부산시민들의 예산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들 역시 어떻게 집행되고 보완되는지 정책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
- 김경아. (2021). 중소기업의 혁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혁신 성공 경험이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25(2): 191-214.
- 김사현. (2015). 사회과학연구: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27-57.
- 김수정·남찬섭. (2015).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연구」, 46(4): 351-37.
- 김윤태·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90: 331-378.

- 김희진·전희정. (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복지욕구, 복지인식 및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95-121.
- 남윤민.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 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177-204.
- 문승민·최선미. (2019).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3): 289-316.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경돈. (2015).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한국행정연구」, 24(3): 91-119.
- 부산광역시. (2021a), 「제38대 2021 부산광역시 주요업무계획」.
- 부산광역시. (2021b), 「2021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
-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2020). 「2020년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 신나리·이영한·박기백. (2017). 조세 공평성 인식과 공공서비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납세자의 태도 분석: 통일세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2(6): 159-194.
- 신현중·이석환. (2019). 서열종속변수모형의 통상최소제곱 (OLS) 추정은 적절한가?. 「현대사회와 행정」, 29(2): 1-35.
- 유나리·문승민. (20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30(2): 193-217
- 유두호·엄영호. (2020). 사회적 기업 역할 및 영역 확대의 필요성 분석: 국회의원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87-117.
- 유두호·유나리. (2020). 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DI 도시연구」, (18): 261-296.
- 유두호·유승주. (2020). 사회적 기업의 조직 역할 확대. 「인사조직연구」, 28: 59-84.
- 윤선일·엄영호·유두호. (202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증세 태도와 사회문제 해결 조직에 대한 투자의 결정요인. 「GRI 연구논총」, 22(4): 237-258.
- 이미숙. (2020).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인식이 복지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32(4): 741-758.
- 이승주·박소영. (2019).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3(2): 153-173.
- 이윤경. (2017).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8(2): 49-79.
- 이현우. (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정치논총」, 53(2): 249-280.
- 정명은. (2012).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241-270.
- 조정래·박지윤. (2017).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283-319.
- 조진만. (2014). 「한국 유권자의 복지-세금 태도 결정요인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3): 113-134
- 주은선·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주혜린·황정윤. (2020).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465-483.
- 최선미·김태형. (2020). 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3): 125-148.
- 최정윤·유두호·장용석. (2021).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2): 217-246.
- 허수연·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3): 203-235.
- 황창호·김태형·문명재. (2017).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1): 223-254.
- Alm, J., Jackson, B. R., & McKee, M. (1992).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42(1): 107-114.
- Calzada, I. & del Pino, E. (2008). Perceived Efficacy and Citizens'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Reform.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4(4): 555-574.
- Campbell, A. L. (2009). "What Americans Think of Taxes", In Martin, I. W., Mehrotra, A. K., & Prasad, M. (eds.). *The New Fiscal Sociology: Taxation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well, F. A., & Gordon, J. P. (1988). Unwillingness to pay: Tax evasion and public good provi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6(3): 305-321.
- Feld, L. P., & Frey, B. S. (2002). Trust breeds trust: How taxpayers are treated. *Economics of governance*, 3(2): 87-99.
- Jimenez, P., & Iyer, G. S. (2016). Tax compliance in a social setting: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fairness on taxpayer compliance. *Advances in accounting*, 34: 17-26.
- Lieberman, E. S. (2002). How South African Citizens Evaluate Their Economic Obligations to the Stat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8(3): 37-62.
- Lowery, D., & Sigelman, L. (1981). Understanding the tax revolt: Eight explan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4): 963-974.
- Mettler, S., & Soss, J. (2004). The consequences of public policy for democratic citizenship: Bridging policy studies and mass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2(1): 55-73.
- Pierson, P.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amon, L. M. (2000).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An introduction. *Fordham Urb. LJ*, 28: 1611.
- Scholz, J. T., & Lubell, M. (1998). Trust and taxpaying: Testing the heuristic approach to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398-417.
- Sears, D. O., & Citrin, J. (1982).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Harvard University Press.
- Skocpol, T. (2000). *The Missing Middle: Working Families and the Future of American Social Policy*.

NY: Norton.

Spicer, M. W., & Lundstedt, S. B. (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Finances publiques*, 31(2): 295-305.

Staudt, N. C. (1995). Taxing housework. *Geo. IJ*, 84: 1571.

Robbins, S. P., & Judge, T. (2018). *Essenti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부산시청. (2021). 부산청년플랫폼. <https://www.busan.go.kr/index>

부산시청. (2021). 부산아이 다다가치키움. <https://www.busan.go.kr/index>

부산시청. (2021). 복지. <https://www.busan.go.kr/index>

부산시청. (2021). 인구정책 브리핑. <https://www.busan.go.kr/index>

e-나라지표(통계청). (2021). 합계출산률. <https://www.index.go.kr/main.do>

e-나라지표(통계청). (2021). 출생아수. <https://www.index.go.kr/main.do>

e-나라지표(통계청). (2021). 고령인구비율. <https://www.index.go.kr/main.do>

e-나라지표(통계청). (2021). 노령화지수. <https://www.index.go.kr/main.do>

---

최정윤(崔丁允):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마을공동체, 디지털사회혁신 등이며, 주요논문으로 “지능정부에 대한 인식이 정책만족도와 정책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홍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역할-정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jungyoonchoi@yonsei.ac.kr)

유두호(柳杜昊):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보건행정, 사회적 경제 등이며, 주요논문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역할-정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의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정책의 정치적 동학: 성남시의료원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engh1015@yonsei.ac.kr)

### Abstract

#### Determinants of Tax Perception for Welfare Policy in Busan: Focusing on policy satisfac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Choi, Jungyoon

Yoo, Dooho

With the recent emphasis on decentralization, the number of welfare measures promoted by each local government is on the ris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citizens for the welfare policy in Bus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licy perception compared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had a negative effect on perception for tax increase. In other words, when the level of Busan's own welfare policy is recognized as sufficien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the additional tax burden is perceived negatively.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policy satisfaction on the perception for tax increase was strengthened when the level of Busan's own welfare policy was recognized as sufficient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specific welfare programs, economic,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were found to have a favorable impact on perceptions of tax increases, while family care, education, leisure, and local community policies had a negative imp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provide a place for citizens to receive and learn policy information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Busan, and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regular feedback on policies to improve policy satisfaction.

Key Words: welfare policy, tax perception, policy satisfaction, policy recognition, Busan